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형성과 발전

강 근 형*

목 차

- I. 서 론
- II. 국제레짐으로서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 III.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전개
- IV. 결 어

I. 서 론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발전되고 있는 아태경제협력회의(APEC), 동아시아경제협력회의(EAEC), ASEAN+3 정상회의, 동북아경제권(NAES) 등은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담(ASEAN-PMC), 아세안지역포럼(ARF), 아태안보협력회의(CSCAP) 등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다자적 관계에서 안보문제를 협의하는 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에 경제협력이 잘 이루어져 경제협력체가 활발히 구축된다면, 이의 영향으로 역내 국가들간의 안보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안보협력체까지도 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제협력체와 안보협력체가 성공적으로 결성되고 운영된다면, 이러한 협력체들은 동아시아공동체의 결성을 진일보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EU)의 발전과정을 보면, 1952년에 결성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바로 그 시발점이었다. 이를 더 발전시켜 1957년 로마조약을 통해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와 유럽경제공동체(EEC)가 발족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1982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년에는 유럽공동체(EC)로, 1992년에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유럽의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야 보아야 할 것은 소규모의 경제협력체가 공동체 결성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아시아공동체 결성에 있어서도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역내 경제협력체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장에서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축 탐구의 전단계로서 현재 동아시아에서 결성되어 발전단계에 있는 경제협력체를 국제레짐이론의 시각에서 고찰해보려 한다. 이러한 검토는 앞으로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II. 국제레짐으로서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무역과 경제교류는 국가간 평화관계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국가간의 무역을 통해 상호의존이 증진된다면, 서로 이익을 얻게 되어 협조적인 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¹⁾ 즉, 국가들 사이에 경제면의 협력이 증진될수록 안보면의 협력도 증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내의 경제협력체의 결성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들 사이에 경제협력이 증진되어서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 평화를 해치는 전쟁에의 유혹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흡수적인 무정부상태(anarchy)의 사회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개별 국가가 소멸되어 개인을 기본 단위로 하는 세계정부가 구성된 칸트적인 국제사회도 아니다. 여전히 국가의 주권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도 개별

1) Robert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p. 31. 물론 현실주의적인 중상주의자들은 상호이득보다 상대적인 이득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의존의 심화가 안보면의 협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을 편다. 이에 대해서는 *ibid.*, pp. 31-34 ;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참조.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연합체의 초보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들은 18, 19세기처럼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자국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는 없다. 국제법 등의 국제규범과 세계여론이 개별 국가의 행동을 크게 제한한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어느 정도의 규범이 있는 무정부사회, 즉 그로티우스적인 국제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

무정부상태인 동아시아에서 개별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의 규범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는 동아시아지역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국가간의 협력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진일보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은 국가간의 행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경제면에 있어서의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의 구축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제레짐이란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에 따르면, 국제관계의 어떤 특정 쟁점영역에 있어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일련의 원칙(principles), 규범(norms), 규칙(rules), 정책결정절차(decision-making procedures)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원칙이란 사실, 인과관계, 정직(rectitude)에 대한 믿음이며, 규범은 권리와 의무의 견지에서 정의된 행위기준이다. 규칙은 행동을 위한 특정한 규정이나 금지규정을 의미하며, 정책결정절차란 집합적 선택을 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 널리 받아들여지는 관례를 말한다.³⁾

러기(John Gerard Ruggie)는 국제레짐의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는 바, 그는 "행위자들을 지배하는 상호기대, 규칙, 규제, 계획, 조직적인 에너지, 그리고 재정적인 공약들의 집합"이라고 레짐을 정의한다.⁴⁾ 코헤인(Robert O. Keohane)과 나이(Joseph S. Nye, Jr.)는 국가간의 상호의존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국가의 행위들을 지배하는 협정(the sets of governing arrangements)"을 국제레짐이라고 보고, 이 지배적인 협정들은 규칙의 네트워크, 규범 및 절차를 가지고

2) 국제사회관에 대해서는 Hedley Bull,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pp. 23-27 참조.

3) Stephen D.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 Stephen D. Krasner(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 2. 이 논문은 원래 *International Organization* (Spring, 1982)에 실려 있다.

4) John Gerard Ruggie, "International Responses to Technology: Concepts and Tren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Summer, 1975), p. 570.

국가의 행동을 규제하고 그 행위의 결과를 조절한다고 주장한다.⁵⁾ 특히, 코헤인은 레짐을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특정문제들과 관계된 정부들이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칙들을 의미한다고 하며, 이것들은 협상 결과 질서를 부여해 준다고 보고 있다.⁶⁾ 맥(Andrew Mack)과 라븐힐(John Ravenhill)은 레짐을 단순히 “국제협력 촉진을 창출할 수 있는 다자간의 협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⁷⁾

이와 같은 주장을 종합해 본다면, 국제레짐은 특정영역에 있어 국가간의 관계를 조정하여 협력하게 하는 명시적인 협정들인데, 이것에는 원칙, 규범, 규칙, 결정절차가 있으며, 그리고 레짐은 국가간의 관계에 질서를 부여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국제레짐은 국가의 힘과 이익에 따라 쉽게 변화할 수 있는 일시적인 협정과 다르다. 협정은 임시적(ad hoc)이며, 종종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으나, 레짐은 오히려 협정을 촉진하는 규범과 기대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단기적인 자국의 이익을 넘어서는 협력의 한 형태이다.⁸⁾ 따라서 국제레짐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가입하고 사무국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와는 다르다. 오히려 제도화된 국제기구로 발전할 수 있는 과도기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국제레짐이 있음으로 해서 국제관계의 행위자인 국가들은 이기적이며 협소한 이익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좀더 큰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려 하며, 레짐의 원칙과 규범을 지키려 한다. 레짐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레짐은 개별 국가 정책의 의도와 투명성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을 서로하지 않게 되며, 상호 협력을 촉진해 갈 수 있다.

예컨대, 국제무역이나 통화 영역에서 GATT, WTO, IMF와 같은 명시적으로 합의한 협정들은 국제무역레짐 및 국제통화레짐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면에서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려는 NPT 등도 국제안보레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7), p. 5, 19.

6) Robert O.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oulder: Westview Press, 1989), p. 4.

7) Andrew Mack and John Ravenhill, "Economic and Security Regime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Andrew Mack and John Ravenhill(eds.), *Pacific Cooperation: Building Economic and Security Regimes in the Asia-Pacific Region* (Boulder: Westview Press, 1985) p. 1.

8) Krasner, *op. cit.*, p. 3.

그러면 이러한 국제레짐은 왜 결성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현실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의 견해가 다르다. 이를 비교, 검토하여 이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보기로 하자.

고전적인 현실주의를 좀더 세련화한 신현실주의자들은 국제레짐은 '패권국'⁹⁾의 힘과 역할에 의존하며, 패권국이 존재할 때에 그 형성과 발전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¹⁰⁾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제공공재를 공급하고 국가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패권국가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길핀(Robert Gilpin) 등이 주장하는 패권안정이론에 의하면, 패권국이 존재해야만 국제경제를 안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국제레짐을 형성하게 해주며, 패권국의 쇠퇴는 국제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따라서 레짐 결성도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강력한 국제레짐은 패권국가의 힘과 역할에 의존한다고 보기 때문에, 패권국의 쇠퇴에 따라 국제레짐도 점차 약화되어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패권국이 쇠퇴함에 따라 국제체제내의 경쟁적 국가들 사이에 힘이 분산되고, 이는 국제레짐의 약화로 이어진다. 패권안정이론은 국제레짐의 쇠퇴 이유를 국제체제에 있어서의 국가들의 상대적 능력의 변화, 즉 패권적 구조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이들은 2차대전 직후는 미국의 패권이 강했기 때문에 GATT와 같은 국제무역레짐도 잘 결성되어 발전되어 왔으나, 70년대 이후 미국의 패권 쇠퇴로 국제경제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레짐 형성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역설한다. 미국세력의 상대적 쇠퇴는 보호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를 발생시켜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위협함으로써 국가간의 협력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¹¹⁾ 길핀도

9) 패권국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필자는 패권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전 세계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거나 동원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동맹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경제력을 가져야 하며, 셋째 동맹체를 구성하고 국제정치경제 관계를 지배할 규칙과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지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패권이란 "어떤 국제질서 속에서 군사·경제면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가 각국간의 관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규칙과 제도를 결정하고, 자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강근형, "국제정치의 성격 변화와 패권이론," 『국제정치논총』, 제35집, 2호 (1995), pp. 5-38 참조.

10) Robert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pp. 72-73 참조.

11) *Ibid.*, p. 73, 88 : Robert O. Keohane, "The Theory of Hegemonic Stability and Changes

패권국의 부재시 국제적 협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으나, 자유주의 국제체제의 보존은 몹시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신자유주의자들은 패권국가의 쇠퇴 또는 부재 이후에도 자유주의 국제체제는 지속될 수 있고, 국가간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¹²⁾ 즉, 국제관계에서의 행위자는 합리적 이기주의자로서 행동한다는 현실주의 이론의 기본가정을 따르면서, 합리적 선택이론을 사용하여 패권국이 없이도 국가간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패권국에 의해 형성된 국제체제는 일단 형성되면 패권국이 약화된 이후에도 존속하며, 또한 패권국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들은 국제협력이 주는 이득을 얻기 위해 국제협력에 도움을 주는 체제를 만든다고 한다. 요컨대,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국가들일지라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무정부상태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정책을 조정해 협력적인 해결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인의 딜레마게임(prisoner's dilemma game)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논거하고 있다.¹³⁾

서로 분리되어 심문받고 있는 상황에서 죄수들은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양자가 집단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행동하지 않고, 당장의 손해를 피하려고만 하는 개인적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서로에게 가장 바람직한 최적치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간의 군비경쟁과 같은 경우가 좋은 예이다. 미·소 양국이 서로 믿고 핵무기를 파괴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나(CC), 한쪽이 협조할 때 다른 한쪽은 배반함으로써 실리를 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자는 손해가 적은 전략, 즉 핵무기를 개발해 두려는 군비경쟁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다(DD). 이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의 기습과 공갈상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액슬로드(Robert Axelrod)는 수인의 딜레마게임은 1회만 했을 경우는

in International Economic Regimes, 1967-1977." in Ole R. Holsti *et al.*(eds.),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Boulder: Westview Press, 1980), p. 132.

12)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 75-79.

13) 죄인의 딜레마게임의 자세한 논의는 김상준, 『국제정치이론 1』, (서울: 박영사, 1977), pp. 105-114 ;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Jr.,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J. B. Lippincott Company, 1971), pp. 254-278 참조.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만, 1회에 그치지 않고 '맞받아 쏘아주기'(Tit-for-Tat) 전략으로 지속할 경우, 상호 협조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⁴⁾ 즉, 수인의 딜레마 상황에서도 'Tit-for-Tat' 전략을 누군가가 채택하게 되면, 꼭 배신(D)이라는 선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양자가 공히 협조(C)를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임이 1회에 끝나지 않고 반복된다는 가정 하에서이다.¹⁵⁾ '맞받아 쏘아주기' 전략은 일방의 행위가 타방의 행위와 조건부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 전략은 일방의 이타적 협조 또는 협조적 태도를 타방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해 주며, 궁극적으로 협조에는 보상이, 배신에는 처벌이 수반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교육시켜 주는 역할까지 한다. 따라서 이 전략은 '호혜주의'(reciprocity)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모든 것을 걸고 한번 하는 전쟁문제는 서로 협조하기가 쉽지 않지만, 계속 반복해서 거래를 해야 하는 경제문제에서는 국제적 협력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국제레짐의 결성을 통한 국가간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레짐의 참가자의 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 '호혜주의'가 유용한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자들은 배반자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배반자들에 국한시켜 보복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셋째 배반자들에게 보복을 행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장기적 동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¹⁶⁾ 많은 행위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가 더욱 힘들다. 응징은 말할 것도 없고 배반을 구분하기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협조자들 중 어느 누구도 경찰의 역할을 행할 동기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 각 협조자는 규칙을 강제하고자 하는 다른 이들의 의지에 무임승차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레짐 참가자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앞장서서 비용을

14) Robert Axelrod, "The Emergence of Cooperation Among Egois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5, No. 2 (1981), p. 308.

15) 라퍼포트와 참머는 300회 이상 게임을 계속한 결과, 50회 정도의 게임에서 협조적 전략을 택하는 빈도가 73%에 이르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A. Rapoport and Albert M. Chammah, *Prisoner's Dilemma: A Study in Conflict Coopera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1965). 김상준, 앞의 책, pp. 112-113에서 재인용.

16) Robert Axelrod and Robert O. Keohane,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 in Kenneth A. Oye(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 235.

싸가며 응징에 나서려는 국가보다 남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무임승차자들(free-riders)이 더 많아진다.¹⁷⁾ 그러므로 레짐에 참가하는 국가의 수가 많지 않을 때 이탈이 어렵고 이탈자를 찾아내기도 쉬우며 이탈자에 대한 공동 대응도 손쉬워질 것이다. 이 점에서 전세계적인 국제레짐 보다는 지역적 차원의 국제레짐들이 더욱 결성되기가 쉽고, 계속적으로 유지되기가 용이한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신현실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의 주장 중에 어느 것이 국제레짐의 구축을 설명하는 데 더 적실성이 있는 주장일까?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종합하여 설명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자유주의자들은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쇠퇴했다고 보고, WTO나 APEC과 같은 국제경제레짐들이 패권의 쇠퇴 이후에도, 상호 협력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결성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익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레짐이 결성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미국의 패권이 아직은 쇠퇴한 것이 아니며,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과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도로 상기한 국제레짐들도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¹⁸⁾

미국은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어도 여타 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으므로 시장접근 봉쇄라는 정책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핵우산 등의 군사력으로서도 여전히 여타 동맹국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소련 공산주의의 와해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주도국으로서의 국가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여타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¹⁹⁾ 따라서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레짐의 형성도 가능해진다고 보아

17) 이 점은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참조.

18) 이 점에 대해서는 강근형, 앞의 글, pp. 33-34 참조.

19) 이러한 미국의 영향력은 스트래인지가 주장하는 '구조적 힘'(structural power)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구조적 힘이란 세계 여러 국가, 그 정치적 제도, 경제기업, 그리고 여러 전문직업인들이 그 안에서 활동해야만 하는 세계정치경제의 구조를 선택하고 형성하는 힘을 의미한다. 즉, 구조적 힘은 안보, 생산, 금융, 지식면에서 압도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Susan Strange, "The Persistent Myth of Lost Hegemo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4 (Autumn, 1987), p. 565; _____, *States and Markets* (London: Pinter Publishers, 1988), pp. 45-61.

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익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이익들을 잘 조정하여 각 국가들로 하여금 레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리더십이 더욱 더 중요하다. 즉, 국제레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제공공재를 기꺼이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행사하는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국가가 없을 경우에는 레짐 결성을 통한 국가간의 협력이라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에 있어 어떠한 국가가 패권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내의 패권 국가와 전 세계적인 패권국인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 동아시아지역내에서의 중국과 일본과의 패권 경쟁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의 성공을 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단일국가에 의한 패권적 리더십의 제공이 어렵다면 몇몇 국가들이 공동으로 패권적 리더십을 제공하는 경우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올슨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충분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특권그룹'(privileged group)이 있어야 하며,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특권그룹은 반드시 한 국가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패권국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경우에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이해를 갖고 있는 여타 국가도 보조세력으로서 리더십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⁰⁾ 따라서 다수의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국제레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원적인 리더십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영(Oran Young)은 구조적 리더십, 기업가적 리더십, 지적 리더십 등 세 가지 유형의 리더십이 있다고 주장한다. 구조적 리더십(structural leadership)은 위협, 약속, 구조적 힘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하여 국제레짐의 질서구성 원칙과 제도적 형태에 대한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기업가적 리더십(entrepreneurial leadership)은 의제 설정, 협상 해결의 혁신, 중재 등 다

20) 스나이덜도 몇 개의 국가들(k-group)이 국제공공재를 공동으로 제공하여 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Duncan Snidal, "Coordination Versus Prisoners' Dilemma: Implications for Cooperation and Regim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9, No. 4 (December, 1985), pp. 923-42 참조. 또한 21세기의 공동패권(Pax Consortia)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강근형, 앞의 글, pp. 35-38 참조.

양한 협상 기술을 사용하여 합의 도출을 촉진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적 리더십(intellectual leadership)은 레짐의 질서구성 원칙들을 이루는 개념들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능력을 말한다. 영은 국제레짐의 형성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리더십 중 최소한도 두 가지 리더십은 필요하다고 한다.²¹⁾ 이러한 주장은 다원적인 리더십이 레짐 형성을 위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조적 힘이 약한 국가들도 기업가적 리더십이나 지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산물 협상과 APEC의 결성 시에 발휘된 호주의 리더십은 이러한 기업가적이거나 지적인 리더십이었다고 할 수 있다.²²⁾ 그리고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오늘의 세계에서는 지적인 리더십은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의 시민단체들도 발휘할 수 있다. 국가보다도 시민단체들이 오히려 유연한 전략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을 위한 레짐 형성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국가나 시민단체들이 있음으로 해서 국제레짐의 형성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논의가 되고 있는 아태경제협력회의(APEC), 동아시아경제협력회의(EAEC), ASEAN+3 정상회의, 동북아경제권(NAES) 등의 경제협력체들은 경제협력레짐들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에 경제협력이 잘 이루어져 경제협력레짐들이 활발히 구축된다면, 이의 영향으로 역내 국가들간의 안보협력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활성화는 곧 궁극적인 동아시아공동체 결성의 굳건한 토대가 될 것임은 물론이다.

21) Oran R. Young, "Political Leadership and Regime Formation: On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s in International Socie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5, No. 3 (Summer, 1991), pp. 281-308.

22) David P. Rapkin, "Leadership and Cooperative Institutions in the Asia-Pacific," in Andrew Mack and John Ravenhill (eds.), *op. cit.*, p. 109 ; Richard Higgott and Andrew F. Cooper, "Middle Power Leadership and Coalition Building: The Cairns Group and the Uruguay round of Trade Negoti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4, No. 4 (Autumn, 1990), pp. 589-632.

Ⅲ.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전개

1970년대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 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적 상호작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의 역내무역과 투자가 아시아 국가들의 전체무역과 투자의 4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은 아시아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경제협력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민총생산은 세계 전체 GNP의 거의 1/3에 다다르고 있으며, 아직도 여전히 연 7% 정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저축률이 국민총생산의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이 전 세계자본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1992년에 이르러 서는 드디어 아시아 역내무역량이 아시아와 북미 사이의 대평양을 건너는 무역량을 추월하였다. 더욱이 1992년 현재 미국의 아시아와의 무역은 3,450억 달러로 이는 미국의 유럽과의 무역액 2,270억 달러보다 50%가 더 많은 액수이다.²³⁾

이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와 역내무역 및 투자의 증대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체의 형성을 가시화 시켜 주는 견인차의 역할을 한다. 즉, APEC, EAEC, 동북아경제권,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등과 같은 경제협력체들이 이미 결성되었거나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형성에는 1980년대 이후에 심화된 세계경제의 배타적인 지역주의화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였다. 요컨대, 80년대 이후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쇠퇴는 세계경제를 주도·조정하는 패권국가의 리더십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개별국가들은 권역별로 이러한 패권국의 약화로 초래된 세계경제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배타적인 지역경제 블록화를 가속하게 된 것이다.²⁴⁾

23) 안병준, "아태지역의 지역주의," 『계간 사상』 (1996년 여름), pp. 106-107, 114.

24) 패권국가의 쇠퇴에 따라 나타나는 세계경제의 양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강근형, 『미일관계의 정치경제: 미국의 패권과 일본의 도전』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3), pp. 22-44 참조.

1980년대 중반에 유럽공동체(EC)의 통합 강화 현상이 증대되었다. 1986년 EC 정상들에 의해 채택된 유럽단일의정서는 역내에서 국경이 없는 자유로운 상품, 노동력, 서비스, 자본의 이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자유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국내 규제 등을 제거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발전을 거쳐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유럽연합(EU)이 탄생되었고, 2002년 1월부터는 단일경제권의 상징인 유로화의 일상적인 통용이 시작되었다. EU는 이제 지역경제협력의 최고 단계인 통화통합을 거쳐 정치통합단계인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유럽의 경제블럭화에 대처하기 위해 1988년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1993년에는 멕시코를 여기에 포함시켜 북미자유무역연합(NAFTA)을 출범하였다. 2001년 4월에는 캐나다 퀘벡에서 미주지역 34개국 정상들이 모여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of the Americas)를 출범시키자는 퀘벡선언문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유럽과 미주의 지역주의화의 가속화는 아시아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Mahathir Mohamed) 수상은 동아시아경제협력회의(East Asian Economic Caucus, EAEC)의 결성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EAEC는 동남아시아의 ASEAN 회원국과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포함하는 순수 아시아국가들로서만 구성되는 경제협력체이다. 결국, EAEC가 발전된다면 동남아경제가 일본중심경제권으로의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이었다. EAEC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일본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가시화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아세안국가들은 이러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1992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15년 이내에 창설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에 강화된 세계경제의 배타적인 지역주의화의 경향은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시도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 바, 하나는 전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함께 결성된 세계무역기구(WTO)의 탄생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아시아·태평양국가들에 의해 시도된 APEC의 창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APEC의 결성에는 호주, 한국과 같은 지역 패권에

야심이 없는 미들과우어들이 상기한 바의 배타적인 지역주의화를 우려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려 한 '지적 리더십'(intellectual leadership)²⁵⁾에 힘입은 바 크다.

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는 1989년에 보브 호크 당시 호주 총리의 제안에 따라 환태평양지역의 주요경제실체들인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 6개국 등 12개국이 경제협력과 무역증진을 목표로 결성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의 범정부간 협력기구이다. 그 이후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이 가입하여 현재는 총 21개국의 회원국을 가진 아·태지역의 가장 큰 경제협력체이다.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자발성원칙(voluntarism), 컨센서스 합의 방식(consensus)의 3대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며,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기술협력(ECOTECH)을 양대 지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자유무역 원칙에 따라 아·태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APEC의 창설 이유가 있음을 시사한다.

25) 영(Oran Young)에 의하면 국제레짐의 형성에는 구조적 리더십, 기업가적 리더십, 지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조적 리더십(structural leadership)은 위협, 약속, 구조적 힘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하여 국제레짐의 원칙과 제도적 형태에 대한 협상에서 합의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은 레짐의 질서구성 원칙들을 이루는 개념들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능력을 말한다. 기업가적 리더십(entrepreneurial leadership)은 의제 설정, 협상 해결의 혁신, 중재 등 다양한 협상 기술을 사용하여 합의 도출을 촉진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적 리더십(intellectual leadership)은 레짐의 질서구성 원칙들을 이루는 개념들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능력을 말한다. 영은 국제레짐의 형성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리더십 중 최소한도 두 가지 리더십은 필요하다고 한다. Oran R. Young, "Political Leadership and Regime Form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5, No. 3(Summer 1991), pp. 281-308.

구조적 리더십이 약한 국가들도 기업가적 리더십이나 지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APEC 결성시에 발휘된 호주의 리더십은 이러한 기업가적 리더십이나 지적 리더십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분석은 David Rapkin, "Leadership and Cooperative Institution in Asia-Pacific," in Andres Mack and John Ravenhill (eds.), *op. cit.*, p. 109 참조.

APEC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일 뿐만 아니라, 무역 투자의 최대 파트너이다. 2002년의 경우 우리나라 총교역의 70.3%, 대한민국 투자유입건수의 75% 및 투자유입액의 63.7%를 차지했던 것이다. APEC은 우리의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촉진하고 제도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주변 4강 정상과 우리 대통령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이 되고 있으며, APEC 회의에서의 정상들간의 대화와 협조는 한반도는 물론 아·태역내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국은 선진국들의 관심이 미약했던 IT, 교육훈련, 능력배양 분야에서 각종 사업 추진을 통해 APEC 내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회원국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하고 있다. 해가드(Stephen Haggard)에 의하면, '지역주의'란 첫째, 특정지역 내부의 경제적 통합, 둘째, 특정지역 내부의 정치적 협력, 셋째, 지역적 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한다. 지역적 경제통합으로서의 지역주의는 비공식적이고 비정치적인 '연성 지역주의'(soft regionalism)라고 할 수 있으며, 정치적 협력을 목표로 정부간의 협상을 통해 정치적 집단이나 블록을 형성하는 것도 지역주의라고 할 수 있다.²⁶⁾

APEC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그리고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연결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지역협력체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의 '개방적 지역주의'는 두 가지 요소를 전제로 한다. 하나는 역내무역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역내무역의 확대를 위한 공공재를 마련함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APEC 포럼의 초창기에 합의된 의제(agenda)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바로 상호 배타적 또는 차별적인 무

26) Stephan Haggard, "Comment," in Jeffrey A. Frankel and Miles Kahler (eds.), *Regionalism and Rivalr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Pacific Asi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p. 48-49.

안병준교수는 러기(John Gerard Ruggie)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개념을 인용하여 '지역주의'를 지리적으로 한정된 영역에서 3개 이상의 국가들이 특정의 원칙에 따라서 경제나 안보협력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는 경제적 협력의 분야에서는 '개방적 지역주의'로, 안보협력의 분야에서는 '연성 지역주의'라는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안병준, 앞의 글, p. 100.

역관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역내의 무역당사자들간에 좀 더 신속하고 깊은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개방적 지역주의'는 역내경제권의 국가들간에 차별(discrimination)을 철폐함으로써 최혜국 원칙에 입각한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는 메카니즘을 성취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APEC 저명인사그룹의 회장인 버그스텐(C. F. Bergsten)도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역적 차원과 세계적 차원의 무역 자유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지역협력체라고 주장한다.²⁸⁾

APEC은 1989년 11월 호주의 캔버라에서 12개국의 외무장관과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포럼으로 시작되어 현재 21개 국가가 가입해 있는 느슨한 지역협력체이다. 또한 APEC은 2001년 현재 세계 GDP의 61.6%(약 19조887억 달러), 세계 총교역량의 47.2%(약 5조9,820억 달러), 세계 총면적의 46.8%, 세계인구의 42.0%를 포함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이다.²⁹⁾

아태지역내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형성된 APEC은 1989년 제1차 각료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협력 기본원칙 9개항'³⁰⁾을 합의한 이후, 1990년 제2차 각료회의에서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다음 해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에서 목표와 활동 범위를 규정한 후 1992년 제4차 각료회의에서 APEC의 제도화를 위한 '방콕선언'을 채택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점진적인 협력을 이루어 왔다.

1993년 미국의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는 역내시장의 개방과 시장의 창출, 무역 확대, 지역 차원의 교육 협력, 지역내 통신 협력과 환경 보호를 담은 원대한 '경제비전선명'을 채택하였다. 또한 이 회의는 회원국의 정책협리기구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요한 진전을 이룩했다. 즉, 회원국의 정상회담을 매년 개최하는 데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와 통화문제를 논의하

27) Ross Garnaut and Peter Drysdale, "Asia Pacific regionalism: the issue," in R. Garnaut and P. Drysdale (eds.), *Asia Pacific Regionalism: Readings i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Pymble: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94), p. 6.

28) C. Fred Bergsten, "APEC and World Trade: A Force for Worldwide Liberalization," *Foreign Affairs* (May/June, 1994), p. 20.

29) KIEP, "APEC 개요," <http://www.kiep.go.kr>.

30) 이는 성장과 발전 지속 지향, 역내 다양성 존중, 평등한 참가, 비공식적 의견 교환 지속, 공동 이익 추구, 자유무역주의 강화, 상호의존성 활용, 기존 기구 존중 및 신규 참가 기준 등이다. 이동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윤영관·황병무 외, 「국제기구와 한국외교」(서울: 민음사, 1996), p. 784.

기 위해서 재무장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그리고 환경장관 회담 역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더하여 교육 문제와 기업가 회의를 포함한 10개의 협력사업 문제도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1994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APEC 회의와 1995년의 보고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계속해서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라는 목표를 지지함으로써 '개방적 지역주의'를 한층 강화시켜 나갔다. 예컨대, 보고르 선언에서 회원정상들은 선진국의 경우는 2010년, 개도국의 경우는 2020년까지 아태지역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지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채택하였다. 이외에도 동 선언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과 WTO체제의 성공적인 출범을 촉구했다. 그리고 APEC 분쟁 조정 제도의 마련을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APEC의 투자 원칙(investment principles)을 추진하였다.

1995년 11월 오사카회의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지역을 자유무역의 원칙에 따라서 개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산물분야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조치를 바라는 일본과 중국, 한국, 대만을 한편으로 하고, 그러한 특별조치에 반대하는 미국과 호주, 그리고 다른 회원국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심각한 견해 차이가 나타났다. 결국 일본은 양측을 타협시키는 중재를 하였고 그에 따라 개별국가들이 집단적으로 설정한 시장개방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오사카회의는 포괄성과 WTO와 일치성, 비교성, 무차별성, 투명성, 보호적 조치도입의 금지, 차별화된 일정, 유연성, 협력이라는 포괄적으로 규정된 9개의 원칙을 채택한 이외에 행동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룩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오사카회의는 자유무역계획 하에서 회원국들이 상대방에게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 하느냐에 대한 미국과 중국간의 논쟁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개최되는 공식회의를 통해 APEC 회원국들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방적 지역주의와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해 왔으며, 이 원칙에 일탈하는 내부지향적인 무역블록을 형성하는 것에는 반대해왔다. 2000년에 들어

31) M. Richardson, "Pacific Forum Smooth Way for a Trade Pac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17, 1995. 안병준, 앞의 글, pp. 116-117에서 재인용.

와 APEC 회원국들은 세계화의 혜택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신경제 행동계획'(Action Agenda for the New Economy)을 채택했으며 회원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해 WTO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을 촉구했다. 2001년에 제9차 상하이 회의에서는 9·11 테러 이후 악화되는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공조 강화의 일환으로 반테러 APEC 정상선언문과 디지털 사회구축을 위한 e-APEC 전략을 채택하기도 했다.³²⁾ 2002년 제10차 멕시코 정상회의에서는 반테러성명, 투명성 기준, 무역과 디지털 경제 이행 지침을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문제의 별도 성명도 채택되었다.

2003년 제11차 태국 방콕회의에서는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진전을 포함한 무역·투자자유화의 촉진, 반테러협약을 비롯한 역내 안보증진과 경제기술 협력, 구조개혁과 금융협력 등을 통한 APEC 내 파트너십 구축, 조직과의제 정비를 통한 APEC 개혁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콕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정상선언문'(Bangkok Declaration on Partnership for the Future)을 통해 초국가적 테러와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이 APEC 지역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위협임을 직시하고,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들을 2항 '인간안보의 증진'(Enhancing Human Security)에서 명시하였다. 또한 의장 탁신 태국 총리 명의의 '의장요약문'에서는 "북한측에 의해 제기된 안보 우려를 포함, 참가국들의 모든 관심사항을 다루어 나가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³³⁾

2004년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16차 APEC회의(제12차 정상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에너지안보를 포함한 지역경제 현안을, 2차 회의에서 안보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구성, 운영되었다.³⁴⁾ 무역·투자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WTO의 DDA 협상, 각국의 양자 FTA, 보

32) KIEP, 앞의 글.

33) 국정홍보처, 『노무현 대통령 APEC·싱가포르 정상외교』(2003.10.19 - 24) 참조.

34) 칠레의 APEC 회의에 대한 분석은 이동휘, "APEC의 발전 과정과 향후 과제: 안보문제 논의의 대두를 계기로,"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2004. 11. 26) 참조.

고르 선언의 목표 이행 상황 및 각종 무역 자유화 조치 등을 종합하여 통합적인 무역 자유화 계획을 수립하자는 '산티아고 구상'을 발표하고, 차기 의장국인 한국이 이 작업의 진전 상황을 2005년 APEC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합의하였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경제·교역과 안보가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 위에서 10개항의 대테러조치를 승인했는데, 이에선 견착식지대공미사일(MANPADS) 수출통제, 전략물자 수출통제 상의 최적관행 도입 및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 가입 촉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APEC 회의에서 9·11 이후 안보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9·11 이후의 충격 속에서 나온 반테러성명이 점차 반테러·반확산의 차원에서의 제반조치를 포함하고, 이를 '인간안보'의 틀로 종합함으로써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기술협력(ECOTECH)에 이은 제3의 축으로서 안보문제를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와 같이 APEC은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무역과 투자자유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단기적으로는 무역활성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인력자원, 기술, 관광, 통신 등 경제 각 분야와 안보분야의 실질협력 증진을 통하여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겠다.

2. 동아시아경제협의회(EAEC)

냉전시대에 동아시아는 이념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끼리의 지역협력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이념 갈등이 완화되면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역내국가들끼리의 지역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적극화함으로써 세계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되고, 동남아의 화교경제권을 자국의 경제성장의 배후지로 삼는 전략을 취함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경제협의회(East Asian Economic Caucus, EAEC)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Mahathir Mohamed) 수상이 제안한 것으로서, 동남아시아의 ASEAN 회원국과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포함하는 순수 아시아 국가들로서만 구성되는 경제협의체이다. 마하티르 수상은 1990년 12월에 동아

시아경제그룹(East Asian Economic Grouping, EAEG)의 구성을 제안했는 바, 이는 GATT와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아시아국가들의 주장을 강화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즉, 이 구상은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아시아국가들의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 말레이시아가 자국의 농산물 수출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미국, EU, 호주 및 뉴질랜드에 대항하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공동전략 수립을 위한 무역블록으로서 제안한 것이다. 이후에 명칭도 무역 블록의 의미를 완화하고 GATT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로 바꾸었다.³⁵⁾ EAEC는 GATT의 중요한 원칙인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비차별원칙을 수용하고 있었다. 당시 마하티르 수상은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이 난항을 겪고 있었으므로 그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동아시아국가들이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개방적 무역제도를 미리 진전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마하티르의 EAEC 실현 전략은 3단계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제1단계는 ASEAN의 역내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제2단계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국가들을 영입시키며, 제3단계는 베트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의 인도차이나 3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³⁶⁾

마하티르의 EAEC 창설 제안은 범세계적인 무역협정이 교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협력을 모색하려는 매우 온건하고 합리적인 아이디어였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완강히 반대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배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깊은 의구심을 표명했던 것이다.³⁷⁾ 마하티르는 EAEC 제안이 미국을 배제할 어떠한 의도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미국 정부는 결코 이를 확신하지 못했다.

미국의 반대는 마하티르의 반미적 태도에 기인한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었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말미암아 동아시아의 어떤 국가도 이러한 EAEC 결성 제안에 적극 동참할 수는 없었다. 특히, 마하티르가 EAEC 결성에 지도력을 발휘해주시기를 기대했던 일본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결

35) Rapkin, *op. cit.*, p. 120.

36) 오용석,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구상," 이홍표 편, 앞의 책, p. 71.

37) James A. Baker, III, "America in Asia: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Vol. 70(Winter 1991/92), pp. 1-18 참조.

국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지역협력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인 제안인 EAEC 아이디어는 1990년대 초에 무산되고 말았던 것이다.

3. ASEAN+3 정상회의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신화에 충격을 가했던 1997년 말에 갑자기 EAEC 아이디어가 다시 부활했다. 1990년대 초 개방무역체제 이슈와는 달리, 1997년의 금융위기는 매우 민첩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동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동아시아국가들에게 역내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지역협력체의 조기 설립의 정당성을 제기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12월 한국, 중국, 일본의 지도자들이 아시아 금융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집단적인 행동을 협의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의에 초대되었다. 이후 이 회담은 'ASEAN+3 정상회의'(ASEAN plus Three Summit)라고 불리워졌으며, 매년 개최되는 지역협력 정상회의가 되었던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아시아통화기금(AMF)을 창설하자는 주장에는 반대했지만, 동아시아국가들의 정상회의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1999년에 ASEAN+3 정상회의는 최초로 동아시아국가들이 정치, 경제, 문화의 교류를 위해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동시에 한, 중, 일 지도자들간의 정상회담도 개최되었으며, 3국 지도자들은 공통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전 세계의 안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3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01년 11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13개 회원국의 학자 등 26명으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은 회의보고서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목표로 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결성을 제안했다.³⁸⁾

38) 동아시아 비전그룹의 일원으로서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한승주 전 외교통산부장관은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꼽고 있다. 1 동아시아국가간의 갈등 해소와 평화 증진, 2 교역, 금융, 경제발전 등에 있어 지역 내의 협력 강화, 3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 자원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과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통치체제의 조성, 4 동아시아의 양 축을 이루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결속 도모, 5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아시아의 유대감과 정체성 구축. 『동

2004년 11월 29-30일 사이에 라오스의 비엔티엔에서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은 제8차 ASEAN+3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³⁹⁾ 이번 정상회의에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 정상 및 러시아 외무장관까지 함께 초청되었으며, 채택된 문서만도 23개에 달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정상급 다자 외교 무대가 되었다.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2005년 말레이시아에서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인 바, 동아시아정상회의 문제와 관련하여 ASEAN 정상들은 2005년 ASEAN+3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말레이시아에서 연속적 형태로 제1차 회의 개최에 합의하였다. 제1차 EAS에는 ASEAN+3 국가들이 참여하고 회의형태도 기존 ASEAN+3 정상회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1997년 이후 동아시아 13개국 정상들은 ASEAN+3의 이름으로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아세안이 주인으로서 한국, 중국, 일본 3국을 초청하는 형식이였다. 따라서 동아시아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 13개국은 각각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동북아국가들은 아세안과 동등한 발언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동아시아정상회의가 발족해도 당분간 ASEAN+3 정상회의가 존속하지만, 이제 동아시아 협력은 기존의 'ASEAN+3체제'에서 '동아시아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며 동아시아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이번 ASEAN 정상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아세안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채택된 2003년 10월의 'ASEAN 협력선언 II(Bali Concord II)'를 구체화하기 위한 "ASEAN 안보 및 사회문화 공동체 행동계획"이 서명되었고, 아세안 역내통합을 위한 1998년 '하노이 행동계획(HAP)'을 보완하고 향후 6년간 역내국가들간 개발격차 해소를 골자로 하는 '비엔티엔 행동계획(VAP)'이 채택되었다.

1단계로는 2007년까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6개국이 무역관세를 철폐해 통합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나머지 4개국이 2012년까지 자동차와 섬유, 전자

아일보], 2001년 11월 6일 참조.

39)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배극찬, "제8차 ASEAN+3 정상회의 결과분석: EAS 추진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2004. 12. 17) 참조.

부문에서 관세를 없앨 예정이다.⁴⁰⁾ 아세안 단일시장의 열개가 그려지면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하겠다. 아세안과 중국은 2004년 11월 29일 2010년까지 모든 교역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 또한 2005년부터 한국, 일본과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던 것이다.

한·중·일 3국 정상들은 2003년 공동선언 채택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3국협의체가 구성, 운영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3자위원회가 제출한 3국협력에 관한 '실적보고서'(progress report)와 '행동전략'(action strategy)채택을 승인하였다.⁴¹⁾ 2003년 3국 공동선언에서는 무역 및 투자, 정보통신산업, 환경보호, 재난 예방 및 관리, 에너지, 금융협력, 과학기술, 관광, 수자원 보존, 문화 및 인적 교류, 국제문제, 아시아 지역협력, 안보, 사회 및 초국가 문제 등 14개 분야의 협력 분야를 예시한 바 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3국 정상들은 ASEAN+3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동아시아공동체(EAC)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ASEAN의 주도적 역할을 존중하는 동시에 3국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ASEAN 내부 합의를 전제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를 지지했던 것이다.

그리고 3국 정상들은 북한이 6자회담 조기 개최에 응하고 핵 폐기에 관한 전략적 결단을 조속히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3국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역내 환율안정 문제, 유엔개혁 문제, 이라크 문제 등도 논의되었다.

한편, '한국-ASEAN 정상회의'에서는 양측간 공식대화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한-ASEAN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과 ASEAN은 2005년 초부터 FTA 협상을 개시하여 2년 안에 협상을 종료하고 2009년까지 양측간 자유무역지대(AKFTA)를 결성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ASEAN 측이 요청해 온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공식 가입하였다. 또한 ASEAN 측은 역내통합에 대비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내 대학에 ASEAN 연구과정 설치

40) 『세계일보』, 2004년 12월 20일.

41) 배궁찬, 앞의 글, pp. 2-3.

를 제안했으며, 한국측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ASEAN의 지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ASEAN 국가들은 한국의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지지하고,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희망했던 것이다.

4. 동북아경제권(NAES)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모색

동북아경제협력체에 관한 구상은 아태경제협력체의 구상과 맞물려 이 지역의 이데올로기적 구조가 약화되면서 산발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동북아경제권(Northeast Asian Economic Sphere, NAES)은 1989년 1월 북경에서 체제가 다른 인접지역 간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된 “동북아경제권의 협력 발전 문제 세미나”에서 일부 학자들이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 정부의 통일된 구상이나 제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다. 동북아 지역의 선진국인 일본과 신흥공업국인 한국, 그리고 후발국인 중국과 북한이 경제적 격차에 따라 수직적 또는 수평적 분업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이 구상은 비롯되고 있다.

중국학자들은 동북아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거기에 적합한 경제협력체제로서의 경제공동체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⁴²⁾ 이들이 보는 동북아지역의 특징은 ① 두개의 다른 체제와 세 개의 다른 경제발전수준을 가진 산만성, ② 자원, 경제 및 기술의 상호보완성, ③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개발 잠재성이다. 이러한 지역 특성 때문에 동북아의 경제협력은 경제와 정치의 분리, 민간과 정부의 분리, 그리고 지방과 중앙의 분리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각국의 자발성과 호혜평등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한다.

동북아경제권의 접근 단계는 쌍무적 방법에서 다각적 방법으로, 민간차원에서 정부차원으로, 무역에서 전면적 협력으로, 그리고 특정 협력지역에서 내외 협력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시간적 단계에서 보면, 현 시점

42) 이하의 논의는 오용석, 위의 글, pp. 76-77 ; 任文俠, “論東北亞區域經濟合作與分工”, 國民大學校 中國問題研究所·中國 對外經濟貿易部 亞太經濟研究所, “東北亞經濟共同體問題 探討國際研討會”, 資料 (北京, 1991. 10. 10-12), pp. 3-7 참조.

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은 1 동북아 국제학술기구와 경제조정회의의 결성, 2 동북아 지방도시 연석회의 구성, 3 동북아 경제협력 및 개발기금(또는 은행)의 설립, 4 동북아 교통, 통신 및 관광협정의 체결, 5 동북아 자유무역구와 경제특구의 설치 등이다.

단기적으로는 1 동북아지역 국가들간의 쌍무적 또는 다각적인 무역, 금융, 기술, 노무, 환경보호, 인구조정, 토지개발, 생산 등 간단하고 낮은 단계의 협력으로부터 시작하며, 2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경영하며, 3 중국, 소련 및 북한의 국경에 공동 투자로 경제특구 또는 자유무역가공구를 설치하여 다각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중국의 길림성 훈춘(琿春)시가 '광촨(防川)항 개발 및 두만강의 상업적 운하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다각적 협력체제에 바탕을 둔 것이다. 중국이 보는 다각적 협력체제는 소련, 몽골 및 북한의 북3각과 중국, 일본 및 한국의 남3각 간의 쌍무관계의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분업체계에 바탕을 둔 자유무역권의 형성을 큰 목표로 한다. 그것을 위해서 1 동북아 국가간에 발전의 격차가 큰 산업구조를 비교우위에 따라 질서 있게 조정하고, 2 다각적인 경쟁 메카니즘을 구축하며, ③ 동북아지역의 자원순환 메카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경제권의 논의는 주로 중국의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동북3성의 학자들로부터 주장되고 있다. 동북3성은 중앙정부의 관심이 낮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다. 냉전의 종식과 한중수교 이후 서해안 개발과 북한의 개방 유도와 관련, 한국의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은 한층 증대하고 있다. 특히,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이 지역의 개발 가능성은 한층 고무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도 자국기업들의 투자대상지역으로서 만주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이 물류 수송 면에서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발전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경제권의 형성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냉전의 극복이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이 폐쇄적 고립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개방정책으로 선회해야 만이 동북아의 경제협력은 가시화 될 것이다. 다만 북한을 개방으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서도 동북아경제권의 결성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러므로 한국으로서는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북아경제공동체와 관련하여 일본의 구상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환동해(일본해)경제권'의 구상이다. 환동해란 한국, 일본, 북한을 주요 구성국으로 하여 동해를 공통의 내해(內海)로 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지역(특히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지방, 사할린주, 아무르주)과 중국의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며,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북아경제권에 속한다.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환동해경제권은 현재 아시아의 육지 면적 중 약 20%, 전 인구의 10%(약 2억 9천만명), 그리고 대략 3조 달러에 달하는 국민총생산액이 집중되어 있는 대경제권이다.⁴³⁾

환동해경제권은 일본이 이 지역에 있어서 자국의 고도 기술과 자본, 한국의 기술과 자본, 러시아 극동의 풍부한 천연자원(석탄, 천연가스, 비철금속, 목재, 수산물 등), 중국의 농산물과 노동력, 북한의 광산물과 노동력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호혜의 원칙 하에 협력과 국제분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 구상 역시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주로 지역적 차원에서 니이가타(新潟), 도야마(富山), 호꾸리꾸(北陸) 등 동해연안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거나 연구회를 조직하고,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한 조사와 시찰과 같은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구상은 아직까지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환동해경제권 구상도 역시 한반도의 긴장 해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이 핵 개발과 같은 무모한 군사행동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정책으로 나온다면 일본과의 수교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이 구상도 점차적으로 가시화 될 것이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서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오고 있으며, 고이즈미 장관은 '동아시아 경제연대'의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연대'는 ASEAN+3으로 구성된 동아시아국가들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원만하게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사람·자본·기술의 이동 무역 등의 폭넓은 분야를 포괄하는 '경제긴밀화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을 체결하여 한층 더 활발한 경제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1년에 일본은 싱가포르와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43) 민족통일연구원,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와 동북아질서』, 연구보고서 92-04 (1992년 10월), p. 58.

EPA를 체결한 데 이어 2002년 1월 FTA(Japan Singapore Economic Agreement for a New Age Partnership)를 체결하였으며, 멕시코와도 그 협정을 교섭 중에 있다. 한국과 중국과도 '산관학공동체연구회'를 결성하여 EPA 및 FTA의 공동 연구에 들어가 있고, ASEAN의 선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과의 사이에서 각각 2개국간의 연구회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⁴⁴⁾

중국은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하고 있는데, 특히 한·중간의 FTA를 먼저 수립한 이후 이를 한·중·일 FTA로 확산하는 시나리오를 선호한다.⁴⁵⁾ 중국은 동북아 지역협력에서 일본에 주도권을 놓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한·일 FTA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FTA가 합의될 경우 경제적인 손익 이외에도 일본-한국-대만-필리핀-싱가포르로 연결되는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의 가능성에 더욱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FTA 합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중국의 FTA 추진 계획은 첫째, 중-ASEAN FTA 추진, 둘째, 아세안국가와 양자간 FTA 추진, 셋째, 한·중·일 FTA 교섭 추진 및 중·일 혹은 한·중 FTA 추진, 넷째, 다른 지역과의 양자간 FTA 추진 및 ASEAN+3 FTA 추진 등으로 알려져 있다.⁴⁶⁾

이와 같이, 한·중·일 FTA를 통한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중국이 적극적인 이유는 동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대외협력 이미지를 적극 과시함으로써 자국의 경제발전과 역내의 경제협력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도모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바의 일본과 중국의 대외경제 구상은 한국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와 맞물려 한·중·일간 FTA의 체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중·일 FTA 논의와 관련하여

44)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일본의 보는 '동북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경제연휴'로부터의 제도적 접근," 제주발전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주최 국제학술회의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과 제주의 역할," 발표논문집, 2003년 6월 20일, p. 47.

45) 이장규,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협력 가능성," 『아시아의 장래는 있는가』,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년도 춘계세미나 자료집, p. 14.

46) 중국의 FTA 정책에 대해서는 Hyun Joon Cho, *China's Approach toward FTAs with East Asian N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KIEP, 2004; Pangestu, M. and S. Gooptu, "New Regionalism: Options for China and East Asia," in K. Kruman and H. Kharas (ed.), *East Asia Integrates: A Trade Policy Agenda for Shared Growth* (Washington D.C.: World Bank, 2004) 참조.

여 한국의 입장에서 한·일 FTA를 먼저 추진하느냐,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중·일 FTA를 처음부터 같이 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 입장이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삼국이 같이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⁴⁷⁾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한·일 FTA를 먼저 시작하고 중국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일양국이 경제발전도 면에서 유사하여 통합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한·일간의 경제통합은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동북아시아의 FTA 등 지역통합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역내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동북아공동체'의 실현을 목표로 두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상호이해의 증진과 공감대 조성이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데에도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비경제분야 특히 사회, 문화 분야 등에서의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결 어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발전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있어 무정부상태를 완화하고 국제제도에의 참여를 통해 관련국가들이 이기적인 국가이익을 넘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다자협력을 위한 다양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들이 좀 더 발전하여 제도화의 단계를 밟게 된다면, 이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견고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제도들은 불확실한 행위자들 사이에 투명성을 높여주어 상호신뢰를 구축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발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협소한 시장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이러한 협력체에 끌어들이므로써 한반도의 공동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47) 이 점은 박제훈, "동북아경제공동체, 쟁점과 제안," 한국동북아시아연구원 편,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 110-111 참조.

서 평화 통일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다만, 현 상황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은 역내 주요국들의 정책과 전략이 서로 상충하는 점이 있어 쉽게 진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동아시아지역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 국력의 차이는 물론이고, 역내 국가간 신뢰 및 대화의 전통이 미약하고 동질성이 결여되어 있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공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해 가는데 있어 역외의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풀기가 어려운 난제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나 동아시아공동체의 결성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개방적 지역주의'를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미국과의 양자관계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급한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보다 느슨한 지역협력체로서 출범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동아시아공동체의 결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기한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역내국가간의 신뢰와 상호협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한국과 중국에서는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그 경제력을 토대로 군사대국화로 나아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매우 높다. 특히, 과거 일제의 식민지정책과 태평양전쟁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구심은 더욱 배가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본이 과거에 대해 솔직히 반성하도록 한·중 양국은 정부차원은 물론 민간차원에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개혁·개방이후 경제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왕의 군사대국으로서의 영향력과 맞물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패권 추구 양상이 노골화되는 것에 대하여 주변 국가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은 매우 필요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변국들의 여론을 동원, 중국의 위압적인 대외 행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을 위해서는 지식인들 간의 가치보완성이 중요하다. 지식인들은 정치엘리트들보다는 동아시아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국가 이기주의를 초월하여 공동 번영하는 것에 더 호의적이다. 지식인들 간의 상호 교

류와 협력은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확보해가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동아시아지식인 연대”를 모색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역내 지식인들의 상호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